

학자로서의 삶과 연구윤리 이야기

박병기(한국교원대학교)

1. 우리 시대의 학자(學者, scholar)

우리 시대의 학자는 어떤 존재자일까? 국어사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자는 말 그대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일로 삼기도 하는 사람이다.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서양철학자 스피노자처럼 평생을 안경알 깎는 일을 하면서도 학문의 역사에 의미 있는 궤적을 남긴 사람도 꽤 있다. 20세기 서양철학을 ‘이성에서 언어로 전회(轉回)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비트겐슈타인도 꽤 긴 시간을 ‘명예롭고 정직한 노동’을 위해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에게 학자는 대체로 주로 대학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학문의 중심이 대학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20세기 이후 강화된 현상으로, 일제 강점기 왜곡된 형태의 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우리도 그 흐름을 받아들였다. 그 후 채 한 세기도 지나가기 전에 원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의 양적 팽창에 성공했고, 이제는 오히려 그 대학을 주체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야 할 학자들이 입학생 모집에 내몰리면서 ‘잡상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거나, 온갖 연구 부정행위와 성추행 등 파렴치한 범죄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유난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실천적 지식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캠프마다 변호사들과 함께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라는 사실이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중 하나다. 교수로 상징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안목과 지식을 토대로 국가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참여 비율 자체가 높다는 점과, 때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이른바 ‘폴리페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학자는 과연 어떤 존재자일까’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학자는 대체로 직접적인 생산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는 학문 활동의 결과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과거제도를 통한 학자관료의 선발제도를 먼저 정착시킨 중국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후자가 대세를 이루었고, 귀족 중심의 정치 전통을 갖고 있었던 서구의 경우는 전자가 대세를 이루었다. 당시 이탈리아 유력 정치인에게 헌정하는 헌사가 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 전통 속에서 퇴계와 율곡이 동시에 선보인 『성학십도』와 『성학집요』에서 성학(聖學)은 성리학입과 동시에 제왕학이었다. 성리학자인 관료가 세자의 스승이 되어 왕을 성리학자로 만

들고자 했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대표하는 세 선비 중 둘로 꼽히는 퇴계와 율곡이 모두 성학에 관한 책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한 사람인 남명은 상소와 교육을 통해 물러나[處] 정치에 관여하는 선비 모형을 보여주었다. 조선 정치에서 사림파가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로 학자의 정치 참여는 수기(修己)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의무로써 치인(治人)의 구체화였다.

우리 시대의 학자는 이런 동서양 전통의 학자 모형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거의 온전히 차별화되는 지점도 보유하고 있다. 그 지점은 바로 우리 시대의 학자도 정치인 등 다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자에게도 먼저 시민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요구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특정한 역할을 한시적으로 맡은 시민들일 뿐이고, 학자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유로 학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우선 시민으로서 최소도덕이다. 다른 시민을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에티켓과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으로서 정의,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이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되는 최대도덕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는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모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직 윤리가 바로 이 지점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기대 수준과 대우에 상응하는 역할도덕성과 전문직 윤리가 더해진다 는 의미다.

조선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그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선비였고, 그들은 문반과 무반을 포함하는 양반이라는 높은 신분을 보장받았다. 그 신분에 맞는 윤리가 수기안인(修己安人)의 도덕적·정치적 의무로 주어졌지만, 실제로 그런 모형을 보인 사람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는 모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신분제의 와해와 함께 새로운 시민사회에 맞는 질서가 자리잡아야 했음에도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돈과 권력으로 상징되는 상류층의 일반 시민만도 못한 부도덕함을 ‘법꾸라지’ 같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불행히도 이번 대선의 유력주자들도 이 범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학자는 어떤가? 시민들의 기대 속에는 분명 이런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체가 학자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대학교수에 대한 인정지수가 많이 낮아졌고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인식은 더 낮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학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까지 무너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학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연구이고 그것에 더해 교육과 사회봉사가 주어진다 는 전제를 확인하면, 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는 연구윤리이다. 이 연구윤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일까?

2. 우리 연구윤리의 자화상

윤리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을 화두(話頭)로 삼아 등장하는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이다. 우리 언어 전통 속에서는 도덕(道德)이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도(道)와 그

도에 다가서는 데 필요한 실천역량인 주체의 덕(德)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개념 구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도덕 과목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윤리 과목으로 부르는 일상어의 관행으로 정착해있다. 그런데 이 둘이 각각 라틴어 기원의 모랄(moral)과 희랍어 기원의 에틱(ethic)의 번역어로 채택된 이래 일상적인 혼란이 윤리학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윤리학에 기대서 이 두 개념을 교환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윤리학자들까지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덕교육과 윤리학 영역의 이러한 혼란은 연구윤리 같은 실천윤리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고 또 통용될 수 있는 도덕인지를 헤아리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윤리는 너무 쉽게 법적 강제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관행이 정착해 있고, 연구윤리 논의 또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법적 처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 2022.2.7., 8쪽, 밑줄은 발제자의 것임)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개정 중에 있는 이른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들은 발제자가 밑줄로 강조한 것들이고, 이 내용들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연구자가 ‘이 시대의 학자’라는 정체성만 공유하고 있으면 이런 지침을 마련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10번의 강제에 근거해서 학회의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지금 이 시간의 만남도 필요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학자가 전문직윤리로서 연구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요구라기보다는 요청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 제재 이전에 스스로 제재하고, 그것이 미흡하거나 혹시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회와 같은 학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내야만 하는 일들이다. 그래야만 ‘연구윤리’라는 개념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법적 제재를 전제로 논의되는 모든 연구윤리 논의는 그런 점에서 본령에서 이탈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윤리 관련 담론들이 주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이유로 논문이나 학위를 취소하고, 더 나아가 업무방해 등의 법적인 처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연구윤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3. 학자의 실존적 삶과 연구윤리의 제자리 찾기

우리는 왜 학문을 하는가? 이 물음에는 다양한 답이 제시될 수 있다. 생존(生存)과 실존(實存)의 두 차원에 걸쳐 살아가야 하는 시민으로서 학자가 생존을 이유로 학문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글쓰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만약 학자들이 하는 학문의 사회적 유효성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글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시민과 시민사회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생존의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면 인간은 실존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내가 하는 학문 활동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런 과정에 속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삶 또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열망으로서 윤리와 만나게 되고, 학자인 우리들에게 그 윤리는 당연히 연구윤리 영역으로 확장된다. 우리가 학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정직과 투명성, 양심, 인정, 존중, 책임 ..., 이런 것들이 연구윤리의 핵심이다. 그냥 학자로서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되지, 다른 차원의 연구윤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학문적 글쓰기에는 그 시대와 학문공동체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임시적인 규칙 또는 질서가 요구되고, 이런 것들을 익히는 과정이 대학원 생활이다. 논문 주제를 어떻게 잡고 그 주제에 맞는 1차 문헌과 2차 문헌을 어떻게 찾아 공부할 것인가, 그렇게 접한 문헌들에서 얻은 선배 또는 동료학자의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학문공동체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고, 선배학자는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감당한다.

이런 역동적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각주만 많이 달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을 각주 없이 무분별하게 펼치는 두 뿔 사이를 잘 넘어가는 일이다. 너무 많은 각주, 또는 편향된 각주에만 의존하거나 꼭 필요한 각주마저 생략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나열하는 논문은 논증(論證)의 과정, 즉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 또는 경험적 근거를 대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 학계의 서구(특히 미국) 편향성으로 인해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곡학아세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술이부작(述而不作), 즉 자신은 선현들의 지혜를 있는 그대로 계승하여 펼쳐보일 뿐 새로운 것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공자(孔子)의 지향은 자칫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각주구검의 오류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성리학과 선불교로 대표되는 우리 전통학문의 글쓰기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원효나 주희의 글쓰기 방식, 즉 전승을 토대로 기술하면서도 자신만의 해석과 함께 새로운 주장도 조심스럽지만 때로 적극적으로 펼치는 소(疏)와 별기(別記), 집주(集註)의 방법이 무분별하고 편향적인 각주 달기를 통한, 어설픈 논증과정이 문제가 되는 현재 학계의 풍토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원효와 주희, 지눌은 모두 자신의 시대를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열린 공부 자세를 견지했던 진짜 학자들이기 때문이다.